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9호 소개

□ 최신 세계헌법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헌법불합치 결정>은 독일이 2050년 온실가스 중립국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로 감축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각 부문별 감축 할당량에 관하여 규정한 연방기후보호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미래세대의 자유권에 대한 '유사침해적 사전효과'를 가진다고 하면서, 입법자로서는 온실가스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감축되어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세대와 미래세대에 고르게 분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30년 이후에 더 큰 감축부담을 전가하고 있어, 미래세대의 자유권을 제한함에 있어 비례성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조항은 잠정 적용되지만, 입법자는 2031년 이후의 지속적인 감축 목표에 관한 규정을 2022년 말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여가 및 체육시설에 대한 출입금지 법규명령의 위법성>은 행정부 장관이 발령한 법규명령이 수권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는지 문제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 제정권자가 법규명령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라는 공익과 이해관계자들의 사익에 대한 형량이 어떠한 자료에 근거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공개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된 법규명령 제정당시 자료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적 판단에 근거하여 어떻게 형량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한 법규명령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배심원단 비(非)만장일치에 의한 유죄평결 위헌 결정의

소급효> 사건은 배심원 만장일치를 이루지 않았음에도 유죄평결을 내리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연방대법원의 기존(2020. 4. 20.) 판결('Ramos 판결')의 후속 사건입니다. Ramos 판결이 선고되기 전 비만장일치에 의한 배심원단의 유죄평결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 사건의 청구인은 Ramos 판결이 자신에게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Ramos 판결이 예외적으로 소급적용되는 '분수령적 형사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분수령적 형사절차에 관한 결정'에 예외적 소급효를 인정할 이유도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Ramos 판결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3호(2020. 6.)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ri.ccourt.go.kr/cckri/popup/selectNewsLetter.do?classSeq=162

미국 연방대법원의 <영장 없이 이루어진 자택 내 총기 수색 및 압수의 위헌성> 사건은 미국 헌법 수정 제4조의 부당한 압수·수색·체포로부터의 자유와 영장주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연방대법원은 기존의 Cady 판결에서 경찰이 영장 없이 이미 압수되어 있는 '자동차'를 수색하여 총기를 찾아낸 것은 '비형사적 지역사회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위와 같은 예외를 '가택'에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문제된 가택 수색행위가 헌법 수정 제4조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형법과 달리 권리상고를 금지한 소년형사법의 위헌성>은 소년범의 경우 성인과 달리 대법원의 허가 없이도 자동적으로 상고 가능한 권리('권리상고')를 인정하지 않는 소년형사법 조항이 캐나다헌장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연방대법원은, 권리상고를 인정하는 것이 근본적 정의를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고,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년형사법 체계의 전체 맥락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소년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위 조항이 청소년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아동 예방접종의무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사건은 체코에서 어린이 자녀를 둔 부모에게 소아마비, B형 간염, 파상풍, 풍진 등 잘 알려진 일부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제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유치원에 입학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과도한지 문제된 사건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질병으로부터 개인과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긴절한 사회적 이익을 위한 것이고, 아동 예방접종 실시에 관한 체코 당국의 폭넓은 판단재량이 인정되므로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세계헌법재판기관 소개

러시아 헌법재판소, 아르메니아 헌법재판소 및 조지아 헌법재판소를 소개하였습니다. 위 세계헌법재판기관들은 기존에 소개된 적이 있으나, 그간의 헌법 개정 또는 주요 법률 개정을 반영하여 다시 소개하였습니다.

□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에서는 최신 학회지에 실린 세계헌법재판관련 논문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 국외통신원 소식

프랑스 통신원 소식으로 소개된 <보건 증명서 도입과 '보건비상사태 종료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헌법적 논의>는 프랑스에서 팬데믹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를 규율하는 법률인 '보건비상사태 종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위 및 일부 조항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소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위기상황 대응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건강관련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휴대전화 번호 등)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정보처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며 해석유보부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팬데믹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 통신원 소식으로 소개된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는 연방기후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독일에서 있었던 사회적 논란,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해당 결정 이후 독일 내 정치권, 시민사회, 산업계 등 각계의 사회적 반응을 소개하였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보다 생생한 독일 현지의 분위기를 전해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